11일 오후 한 여성 고객이 광주신세계 이마트 주류매장에서 과실 막걸리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막걸리가 부활했다

복분자 등 과실과 만나 웰빙주류로 변신… 젊은층 입맛 사로잡아 매출 급신장

내리막길을 걷던 막걸리가 부활했다. 돌아온 막걸리는 노동자나 농민의 주린 배를 채우던 '탁주'가 더 이상 아니다.

고급 쌀로 빚고 복분자·청매실 등 과일 원액을 첨가해 맛을 내고 캔에 담아내는 등 용기도 다양화했다. 덕분에 대학생 등 젊은이는 물론 여성들까지 즐기는 웰빙 주류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4월 막걸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나 늘었다. 올 들어 지난 1월 64%의 신장세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14.5% 3월 52%로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마트에도 막걸리 바람이 불고 있다. 홈플러스 계림점의 경우 3~4월 막걸리 매출이 전년대비 8%, 전월대비 20%가량 늘었다.

향토 브랜드인 '광주무등산탁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 1월 109%, 2월 105%, 3월 106%, 4월 107%나 늘면서 막걸리의 부활을 실감하고 있다.

부활의 비결은 웰빙 트렌드를 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급 재료를 쓰고, 도수를 낮췄다. 용기를 다양하게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과실을 첨가했다.

복분자·청매실 등을 넣어 건강은 물론 분홍색·초록색 등의 색깔을 띤 컬러 막걸리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가격도 1병당 1천원 대 안팎으로 저렴하다.

이마트는 지난달 복분자 막걸리, 오디뽕 막걸리, 청매실 막걸리를 출시한 데 이어 배 막걸리, 포도 막걸리 등을 매장에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에서도 13종의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다. 페트병은 물론 캔도 용기로 사용한다. 쌀, 배, 복분자, 잣 막걸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결과는 예상 밖이다. 젊은이는 물론 여성들의 입맛까지 사로 잡았다. 과실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에 비해 20%가량 비싼 편이지만 전체 막걸리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0%가량 치솟았다.

여대생 최혜미(23)씨는 "동아리 모임에서 막걸리를 처음 마셔봤는데 도수가 낮고 가격 부담이 없는데다 색깔도 예뻐서 친구들과 종종 찾는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맛이나 용기 등을 차별화한 다양한 막걸리들이 속속 출시되며 여성 고객이 30% 이상 늘었다"며 "막걸리의 부활은 시대적인 환경 변화와 그에 걸맞은 품질 개선,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소비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미분양아파트 845채 더 있었네

주택업계 이미지 훼손 우려 숨기려다

취·등록세 감면에 뒤늦게 '성실 신고'

광주시내 미분양 아파트가 845가구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1억원으로 볼 때 무려 845억원 상당의 미분양 물량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광주시는 11일 "지난 4월 초까지 1만2천460가구인 것으로 파악되던 3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이달 초 집계에선 1만3천305가구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 것은 아니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자치구에 자율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분양 물량을 산정했고, 대상 기간이 동일한데도 갑자기 1천여 가구가 급증한 것이다.

이유는 자율 신고에 있었다. 주택건설사들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을 가급적 숨겼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이미지가 훼손돼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지나 않을지 두려워서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자치단체에 미분양 등록된 아파트를 구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역 주택건설사들은 한 가구라도 더 팔기 위해 '성실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분양 물량은 광산구가 가장 많았다. 수완지구(4천994가구)를 포함해 7천685가구에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서구도 1천385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2천64가구로 크게 늘었다. 북구는 1천340가구에서 1천769가구로 증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 등 양도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 부과

내달 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 원(10월 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주택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부동산 33만 명, 과세대상 주식 2만 명, 기타 골프회원권과 같은 권리 1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소득세를 이미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2만 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의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는 또 하루 0.03%씩 증가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중개법인도 7월부터 아파트 분양 대행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일 경우 이를 알리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연봉·판공비 평균 4억 육박

지난해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평균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업 직원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도 7천400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직원보다 2천만원 가까이 더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297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취합한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산업은행·산은캐피탈·기업은행·코스콤·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과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개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 관련 공기업의 지난해 기관장 평균 연봉은 3억5천400만원이었다.

이들 금융기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3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집행했다. 이는 전체 공기업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 1억5천800만원, 업무추진비 2천3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2.2배 많은 금액이다.

/연합뉴스